캠프도 공약도 '호남 앞으로'…지지율 꾸준한 상승세

조기 대선 이슈&분석

문재인 호남 '비문 정서' 극복할까

전윤철·송영길·송갑석·박광온…
경선 캠프 호남 인사 대거 배치

정권교체·대세론 작용
대체 주자 보이면 요동칠 수도

여야 잠룡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의 '비문'(비 문재인) 정서를 극복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비문 정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호남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등 문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비문 정서를 극복한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등 대선 가도를 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대세론'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비문 정서 극복에 나서고 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 전 대표가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호남 민심의 지지 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경선 캠프에 호남 인사들을 전진 배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배치하고 송영길 의원에게는 총괄본부장을 맡겼다. 임종석 전 의원이 문 전 대표의 비서실장, 송갑석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호남 민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박광온 의원이 대변인이나 언론 지원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인 이개호 의원도 문 전 대표 진영에 합류했다. 김효석·이용섭·정동채 전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문 전 대표를 돕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에서는 심심찮게 전라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 진영 관계자는 "과거 대선 캠프와 비교하면 친문·친노 인사들이 대폭 줄어든 반면, 호남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됐다"며 "친문 색채를 최소화하고 통합형 캠프 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공식 후보 등록 이후, 보다 구체적인 호남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래 전략 산업의 호남 유치 등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호남의 소외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호남의 비문 정서는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율이 40% 후반 대에 이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당 호남권역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확고한 지지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안 부재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비문 정서가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니고 문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주자가 나타난다면 호남 민심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친문 인사들이 다시 캠프의 전면에 등장하거나 패권적 행태를 보인다면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6차 포럼에서 '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의 신발을 전달받은 뒤 아버지 안광명·어머니 정혜경 씨와 대화하고 있다. 안광명 씨는 이날 문 전 대표 지지선언을 했다.

문재인 "원전 신규건설 중단, 제로 국가 지향"

국민안전 정책 제시…"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침몰과 인양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위해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릴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의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정책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 "유명무실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언젠가 다시 오기 마련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 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왜 그런걸 묻나…효율적으로 신문하라"
'끌려가던' 헌재 朴변호인측 작심 제지

탄핵심판 12차 변론 분위기 전환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던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등이 박 대통령 측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제지해 눈길을 끌었다.

9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이 권한대행은 작심한 듯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증인신문에 개입해 대통령 측이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때마다 말 허리를 끊었다. 굳은 표정으로 심리를 시작한 그는 박 대통령 측이 조씨에게 월급을 어떻게 나눠 받았는지를 꼬치꼬치 묻자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신문하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그에게 K스포츠재단의 정관을 읽어봤느냐며 말꼬리를 잡자 "신문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라고 막아섰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 역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계속해 조씨의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다시 물어보자 말을 끊고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느냐.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측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강 재판관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왜 자꾸 불리한 내용을 물으시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리인이 피청구인(대통령)의 이익에 반대되는 신문을 하는데, 핵심만을 물어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헌재가 재판 지휘권을 행사해 탄핵심판 변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이후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둘러싸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대거 받아들여 2월 말 선고가 불가능해지면서 외부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편 더블루K의 대표를 지낸 조성민씨가 회사 사업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공기업)의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K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같이 추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제안서를 만들어 명함을 끼워서 가져가면 나중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제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알았다는 것은 최 회장이 직접 안 전 수석과 컨택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